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 -

【관련 국정과제】 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지원 등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주요내용 】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 분야별 주요 과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 (전략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아동수당을 '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 및 자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여 예방과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도 마련·이행한다. 또한 인프라 확충, 대안적 지불제도 등 소아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지원대상·연령도 확대한다.
 - (전략 2)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 가정형 보호 원칙 하에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광역단위 보호자원 지원·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응해 심층분석 제도를 도입한다.

○ (전략 3)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을 추진한다.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해 나간다.
- 평가체계 정비, 환류체계 개선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성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1)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

* 비만율: ('18) 3.4% → ('23) 14.3% ** 우울증 진료 환자(0~19세): ('19) 5.3만 → ('23) 8.1만명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3대 추진전략)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 전략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 비수도권(83개, +5천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44개(+1만 원), 특별 40개(+2만 원))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 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25) 6개월~13세 → ('26) 6개월~14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 ('25) 12~17세 여아 → ('26) 여아 + 12세 남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 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101→140개소, '30),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26~)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 전략 2.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돌봄비·의료비·물품 등 지원, 가족기능 회복 지원, 양육코칭 등 제공(시범사업, '24~('25) 시범사업 통해 400가구 지원 → (~'29)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26년 600가구 지원)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 ('25)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6)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2026년 3월)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전략 3.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기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 (현행)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일정 절차에 한해 13세 이상 아동만 의견 청취 (가사소송규칙) → (개선(예시)) 아동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재판 시, 연령 불문 진술 청취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전략체계도
2.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별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정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044-202-3559)
			팀장	윤장열 (044-202-3411)
			사무관	최진선 (044-202-341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장	장영진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신요한 (044-202-344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장	모두순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044-202-338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사무관	유능재 (044-202-3393)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장	송영조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044-202-2556)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영재 (044-202-3730)
		담당자	주무관	류인경 (044-202-267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책임자	단장	공인식 (044-202-2790)
		담당자	사무관	강현주 (044-202-279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장	이화영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044-202-3361)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책임자	과장	민혜영 (044-203-6202)
		담당자	서기관	이규성 (044-203-6203)
담당 부서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윤정 (044-203-6033)
		담당자	사무관	전민환 (044-203-6604)
담당 부서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사무관	박선화 (044-203-7214)
담당 부서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책임자	과장	유현종 (044-203-7165)
		담당자	연구관	김현지 (044-203-7147)
		담당자	연구관	문복진 (044-203-7128)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장	권오민 (044-202-6150)
		담당자	사무관	조미영 (044-202-6153)
담당 부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책임자	과장	유성오 (02-2110-4075)
		담당자	사무관	김택균 (02-2110-4082)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서기관	이상전 (044-202-7412)
		담당자	사무관	김소현 (044-202-7477)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책임자	과장	정보희 (02-2100-6361)
		담당자	서기관	강병관 (02-2100-6375)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책임자	과장	이윤아 (02-2100-6341)
		담당자	사무관	은가연 (02-2100-6343)
담당 부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자	과장	하진 (043-719-8350)
		담당자	사무관	고한슬 (043-719-8395)

비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

목표

- ◆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 ◆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 ◆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

**3대 추진 전략
·
10대 주요 과제
·
78개 세부 과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1. 기본 돌봄·양육환경 구현
2.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3.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보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2.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3.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4.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1.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2.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3.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년~2029년)(안)
주요 정책 구조



2025. 12.18.
보건복지부

양육 부담은 줄이고,
보편적인
기본 돌봄 보장



-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복지부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유연근무 활성화 노동부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성평등부 및 복지부 및 나홀로 아동 돌봄 강화 복지부
- 틈새돌봄 확대·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



디지털 환경·과도한 경쟁 속
아동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



-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과기정통부 등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부 및 아동 자살예방 강화 복지부 등
- 소아 의료체계 강화 복지부
- 계절독감·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질병청
- 공교육 내실화 교육부 및 아동 휴식권 보장 강화 복지부



양육
돌봄

발달
건강

국가가 중심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 보호

아동
보호

- 공적 입양체계 안착 및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복지부
- 가정위탁 공적체계 개편 및 시·도 중심 원가정 복귀 지원 복지부
-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 심층분석 추진 복지부
-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법무부 등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복지부



존중·
참여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

-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복지부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복지부
- 아동의 정책 참여 활성화 복지부
- 사법·행정 절차상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확대 법무부·복지부
- 지역 내 아동친화환경 조성 복지부
-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복지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 정리 ('24년-'29년 비교)



구분	주요내용	2024년	2029년(목표)
양육 돌봄	 아동수당 지급연령	0 ~ 8세	0 ~ 13세('30년)
	 일·육아지원제도 지원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유연근무 활성화
	 나홀로아동 발생 예방	-	연장돌봄 확대 및 아동 방임기준 재검토
	 지자체 중심 돌봄 지원	-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운영
발달 건강	 안전한 디지털 활용 지원	-	청소년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과의존 지역사회 통합지원	-	실증연구 및 적용 검토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6개월 ~ 13세	점진적 확대 ('26년 ~ 14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여아만 지원 (12 ~ 17세)	남아 지원 도입·확대
	 미숙아(이른둥이)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6개소), 체중별 3백~1천만원	전국 확대 시행,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
	 달빛어린이병원	101개소	140개소 ('30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시범사업(20개소)	본사업 전환 검토

구분	주요내용	2024년	2029년(목표)
아동 보호	 해외입양 아동	58명	▶ 단계적 중단 추진
	 가정위탁 공적체계 개편	시군구 단위 관리	▶ 국가단위 관리체계 확립
	 시도 중심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시범사업 ('25년~)	▶ 전국 확대 추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연 400가구	▶ 점진적 확대 ('26년 600가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	▶ 심층분석 및 재발 방지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한시 부여 (~'28년 3월)	▶ 실태조사 추진 및 보편적출생등록제도입 검토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보호종료 후 5년	▶ 확대 추진 (예: 청년기 전체)

존중 · 참여	 아동의 기본권 보장	-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의 권리침해 구제	-	▶ 제3선택의정서 비준
	 아동친화도시	민간 98개소 (UNICEF)	▶ 제도화 및 확대 추진
	 아동친화업소	-	▶ 인증 도입 및 정보제공
	 사법 절차상 아동의 진술기회 부여	13세 이상 (가사소송규칙)	▶ 연령기준 완화 (가사소송법 개정)